

# “고사 위기 전남대 여수캠퍼스 공업·해양 분야 특성화해야”

## ■광주·전남북 국립대·병원·교육청 국감 연구비 부정사용 등 재발 방지 촉구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북·제주권 국립대·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교수들의 각종 비위 행위와 교대생들의 성범죄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축소되고 있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목포대에서 최근 4년간 연구재단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된 게 5건으로 그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며 “관련된 3명이 해임될 정도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립대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논란도 많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다”고 대학들의 재발 방지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연구비가 학생들에게 지급되면 곧바로 통지하는 등 집행은 투명화하려고 힘쓰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들을 알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 학생들의 잇단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경미 의원은 여학생 ‘몰카’로 퇴학 처분을 받은 광주교대 학생 등 사건에 대해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이 엄격해야 하지만 성관련 과목 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구체적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관련 과목이 개설됐지만 대부분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유지돼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과정 안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수들의 각종 비리와 추문 문제로 곤욕을 겪은 전남대는 그야말로 ‘난타’를 당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 교수가 ‘똥살통에 가면 날 다 알아본다. 거기에 우리 학교 여학생도 많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전남대에 왜 이렇게 일이 많냐”고 교수들의 일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대 광주캠퍼스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캠퍼스를 공업·해양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대는 2005년 여수대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듬해 3월 통합

연구비 부정사용 등 재발 방지 촉구

교대생 잇단 성범죄 행위도 도마에

전북대 교수 각종 비리·추문 ‘난타’

“고발 사립유치원 무혐의 이해 안돼”

했다. 여수대는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돼 전남대의 지역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임재훈 의원은 “2006년 3월 통합이후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특화 학과나 경쟁력 있는 학과가 광주캠퍼스로 이전·통폐합되면서 대학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됐다”고 질타했다.

여수캠퍼스 입학 정원이 2005년 1479명에서 2018년 897명으로 39.3%, 같은 기간 재학생 수는 4621명에서 3120명으로 33.5% 감소했다. 전광수 38개에서 31개로 줄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여수는 국가산단 등이 있어 석유공학, 화학공업 연구 중점대학으로의 육성과 해양·수산 산업, 해양 물류 등 특화 전공을 육성하기에 유리하다”며 “여수캠퍼스를 공과대학으로 특성화하고, 해양 수산·물류 등 특화 전공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거부와 사기 등 26건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다는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같은 사안(감사 거부)을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등을 처분한 것과 광주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찰의 판단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가 광주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 회의실 대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한유총에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된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재훈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16년 청렴도 16위에서 2017년과 지난해 꼴찌를 했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소 청소트럭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이어 정의선 만난 文대통령...대기업 ‘氣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미래차 부문 경쟁력 1

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바로 다음 날 경제 일정, 그 가운데서도 미래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라며 현대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 “조국 왜 못 지켰나”...친문 반발에 興 ‘진담’

홍익표 “입장 결정 안해” 논란 진화

일각선 “사퇴 너무 늦었다”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당내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친문’ (친 문재인) 핵심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약화한 민심 등을 이유로 당이 ‘실기’ (失期)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당원계사판에는 조 전 장관 사퇴 후 이날까지 이틀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성토했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 찬반 국민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강하게 결집했던 친문 지지자들은 지도부가 조 전 장관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 당원은 “능력 없는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썼고, 또 다른 당원은 “중도층이 돌아서기 전에 당원들이 돌아서겠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등도 이렇게 떠났었다’라는 글을 쓴 당원은 “어쩔 열린우리당 때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라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느냐”고 꼬아붙였다.

친문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의원들도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아쉬움을 질게 드러내고 있다. 다만 지도부에 대한 불만 표출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민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정치도 정치지만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진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되느냐,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되느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내 분위기가 착잡하다”며 “당원들의 불만을 이해한다. 우리도 기본이 엉망인데 당원들은 더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 기류와는 반대로 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오히려 때를 한참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가 사태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서운해하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줄 필요도 있고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해야 하니 골이 좁아플 것”이라며 “중도층 마음을 돌리려면 이번 사태를 불러낸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 비주류가 있었다면 당장 지도부가 책임을 지라”며 치고 나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하태훈 등 물망

검찰개혁 역량·청문회 돌파 초점

靑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불러온 충격파가 상당했던 만큼 청와대에서는 다음 장관을 찾는 작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 의원 가운데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현직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 국면을 돌파할 ‘맷집’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안 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전 의원에 대해 “조 전 장관 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

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다. 실제로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청와대 측의 의사 타진이 있었음에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책임자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봉우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시민사회·학계 출신 중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후임 하마평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얘기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F 2019 ACC GWANGJU FRINGE international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